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 신성장 동력으로

도·바이오진흥원, 세미나 열고 의견 수렴... 제품 실증 인프라 강화 등 제시돼

전북특별자치도가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 강화에 나섰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23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 육성 세미나'를 열고, 산업계와 연구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도가 수립 중인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을 한층 더 내실화하고, 향후 신규 사업 발굴 시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합소아재약, 하립산업 등 도내의 주요 케어푸드 기업을 비롯해 농생명 연구기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북도의 산업



육성 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기업 수요 조사 결과와 추진 중인 맞춤형 케어푸드 실행사업을 공유하고, 산업계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언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R&D 지원 확대 △제품 실증 인프라 강화 △규제 대응 및 인증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도와 바이오진

흥원은 이날 제안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사업계획과 정책 추진 방향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 전북도는 총 1,875억 원 규모의 중장기 육성계획을 추진 중이며, △커스텀푸드 실증형 스마트 생산기술 개발 △메디컬푸드 실증 및 산업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식품 상용화 △AI 기반 식이설계 플랫폼 구축 등 14개

세부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케어푸드는 유전자와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식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첨단 융복합 산업으로,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에 따라 필수적인 미래 먹거리 분야"라며,

"전북은 국가식품클러스터, 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식품·바이오 인프라를 갖춘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전북을 대한민국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장한수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맞춤형케어푸드 추진단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도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산업 육성의 실행력을 높ی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Bravo Korea 황금보름달 이벤트 당첨자 금 증정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외국인 생활·금융 플랫폼 Bravo Korea가 진행 중인 '추석 황금보름달 이벤트'에서 1차 1등 당첨자에게 금 10돈(37.5g)을 증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이벤트 기간 동안 매일 1명에게 금 1돈(3.75g)을 제공, 총 40일간 40명이 증정된다. 여기에 1등 당첨자 2명에게 각각 금 10돈씩 추가 증정해 총 60돈(225g) 규모의 파격적인 경품이 마련됐다. 또한 매일 100명에게 편의점 쿠폰, 선착순 1,000명에게 포인트 혜택 등 다양한 부가 경품도 제공된다.

오는 11월 3일에는 금 10돈을 받을 2차 1등 당첨자가 한 명 더 발표될 예정이다. 이벤트 종료 전까지 누구나 Bravo Korea 앱을 통해 간단히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Bravo Korea 앱에서 출석체크 △해의송금비교 △이벤트 소문내기 △체크 카드 사용 등 미션을 수행하면 자동으로 응모권이 지급된다.

/오상근 기자

전주시-건협 전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

하수관로 시공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하수과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 협회 회의실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하수관로 시공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심 내 하수관로 공사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건설업체와 발주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 회장단을 비롯해 시공사 관계자,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하수와 실무진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계약금액 조정 및 설계 반영 방안 △간접비 보정 △회신 기반 및 책임 체계 마련 △차수 종료 전 조정 완료 등 구체적인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소재철 회장은 "하수관로와 같은 공공시설물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만큼, 열악한 도심 작업 여건과 제한된 예산

으로 인해 시공사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현장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공사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발주처와 시공사 간 소통을 강화해, 어려운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인택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하수과장은 "열악한 하수관거 현장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시공사 애로사항을 줄이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협력체계 구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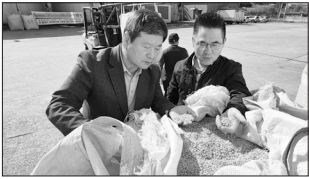
전북농협, 추곡 수매현장 찾아 '현장경영' 나서

전북농협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고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을 시작으로, 추곡 수매가 한창인 도내 각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버건조저장시설(DSC)을 잇달아 방문하며 현장경영 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에는 이정환 전북농협 총괄본부장과 안찬우 경제본부장, 지역 농협 조합장 등이 함께,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폭염·폭우와 병해충(깨

씨무늬병)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확에 매진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 임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북농협은 이와 더불어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의 일환으로, 농업인 및 직원들과 함께 쌀 가공품을 나누며 쌀 소비 확대 캠페인도 병행했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수매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심히 지원하고, 트랙터 지게차 등 장비 이용이 잦은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상근 기자

부처별 할인행사·기획전 등 정보 한 곳에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공식 누리집 구축

전국 단위 초대형 소비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이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며 국민 참여 확대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23일,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통합 누리집(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kr)과 카카오톡플러스 채널을 공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통합 누리집은 중기부를 비롯해 산업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과기부, 행안부, 기재부, 국조실, 관세청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소비축제 허브 플랫폼으로, 국민들이 각 부처별·지역별 할인행사, 기획전, 전통시장 이벤트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누리집에는 △부처별 판매전 △대표 상품 할인 등 주요 혜택 △시·도별 특별행사 △상생소비 복권 △상생페이백 등 다양한 프로

그램이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다.

또한 '주요행사 세부내용' 메뉴에서는 문체부의 '여행가들 가을', 농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소프라이즈', 산업부의 '코리아 세일페스타', 중기부의 '동행축제', 과기부의 '우체국쇼핑' 등 부처별 대표 프로그램을 클릭 한 번으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분야별 할인상품 안내'에서는 자동차, 가전, 생활품, 패션·의류, 수산물, 축산물, 숙박, 문화레저 등 주요 품목별 할인정보와 소상공인 온라인 기획전 내용이 상세히 안내된다.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환급·할인, 상생소비복권 및 상생페이백, 신용카드사 혜택, 배달앱 이벤트 등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도 '주요혜택 한눈에' 메뉴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열리는 40여 개의 지역 소비축제 정보는 '지역별 특별행사' 인포그래픽으로 정리돼, 축제 일정과 장소, 주요 프로그램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공식 카카오톡 채널('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통해서도 국민이 관심 있는 행사 정보를 실시간 맞춤형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오상근 기자

농업현장 인력난 소통·공유의 장 열려

전북농협, '2025년 전북 농촌인력증가센터 워크숍' 개최

전북농협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부안 NH농협 번산수련원에서 '2025년 전북 농촌인력증가센터 워크숍'을 열고, 농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효율적인 인력증가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도내 농촌인력증가센터 관계자와 시·군 공공형 계절근로자 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업현장의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질적 대안을 공유하며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워크숍에서는 △계절근로제도 이해 및 지자체 역할 △농업현장 안전교육 △농촌인력증가 플랫폼 활용방안 △우수 증가센터 운영사례 발표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우수사례 발표 세션에서는 각 지역 증가센터의 혁신적 운영사례가 소개돼, 참가자들이 실질적인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정환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은 농업의 근간을 지탱하는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농협과 지자체,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댄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부안군 공고 제2025-1729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37-8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현황
 - 위치 :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37-8번지 일원
 - 면적 : 247,863㎡, 302필지
 - 용도지역 :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함
-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항
 -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 ◎ 제한의 예외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행하는 공익목적의 행위
 -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 제한고시일 이전에 각종 법령에 의하여 사전결정, 승인, 인가, 신고된 행위
 -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규도 범위 내 행위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 가설건축물 중 공사용 및 공공용 가설건축물(공공사업에 한함)
- 4.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로부터 3년간
- 5.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조서

구분	제한내용	비고
위치 및 면적	- 위치 :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37-8번지 일원 면적 : 247,863㎡	
지정사유	- 도시·군계획위원회나 도시·군관리위원회 결정된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개발행위허가 제한행위 제외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행하는 공익목적의 행위 -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 제한고시일 이전에 각종 법령에 의하여 사전결정, 승인, 인가, 신고된 행위 -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규도 범위 내 행위 -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 가설건축물 중 공사용 및 공공용 가설건축물(공공사업에 한함)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간	

6.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서류 : 실읍생략
7. 관계도서 : 실읍생략
8.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10. 27. ~ 11. 10. (14일 이상)
9.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처 : 부안군청 새만금도시과
(☎ 063-580-4701)
10. 의견제출 : 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2025년 10월 27일 부안군 수